

# 트럼프·김정은, 날밤 새워서라도 북미합의 이룰까

〈1박 2일〉

## 27~28일 베트남서 北美정상회담

1박 일정에 '외교적 성과물' 기대 '회담장소' 北 하노이, 美 다낭 선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진행되자 국내 정치권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정상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첫 정상회담 때는 '하루 일정'으로 만남이 끝났기 때문이다. 즉, 이례적인 북미 정상간 1박2일 일정에는 전 세계에 알릴 '외교적 성과물'이 존재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정치권에서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이 커지는 또 다른 이유는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된 시점과 연관이 깊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밤 9시쯤(미국 동부 현지시간) 연방의사당 하원회의장에서 열린 신년 국정연설 때



도널드 트럼프(앞)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크 펜스(왼쪽)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국민들 앞에서 2차 회담 날짜와 장소를 당당하게 공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지금 당장 북한과 중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2차 회담 일정인 '오는 27일과 28일'과 장소 '베트남'을 발표했다.

이례적인 1박2일 일정 때문일까. 트럼

프 대통령의 당당했던 국정연설 때문일까. 국내 정치권에서는 다가올 북미회담 날짜 및 장소 발표와 관련 '한반도 비핵화' 기대감을 표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운을 뗐

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공개방문 및 실무협상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역시 6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1차 회담과 달리 양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2차 회담의 중요성과 의미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2차 회담을 위한 북미의 노력과 신뢰가 엿보이는 청신호"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속해서 "북미 정상은 첫 만남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진 만큼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한반도 평화의 새 이정표가 새겨질지 기대한다"고 했다.

보수야당도 민주당과 정의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행조치에 따라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경제협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북미 두 정상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2차 회담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미 양국은 개최 장소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자국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미국은 안전 등을 고려해 '다낭'을 각각 선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6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2차 북미회담의 구체적인 장소와 관련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북미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 반려동물 1000만 시대의 그늘... 등록犬 50% 불과 '동물유기 대책 없다'

## 개정 동물보호법 3월부터 시행

50% '필요성 못느껴' 등록 안해 등록제 몰라 31%, 절차 복잡 16%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은 가운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이행관리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검역

본부는 최근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면면접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2014년 7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지만 기르고 있는 반려견을 등록했다는 응답은 절반인 50.2%에 그쳤다.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유기 및 유실 예방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반려견 소유자는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등록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견 동반 외출할 시 인식표 및 목줄 등 착용과 배설물 수거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나, 여전히 5명 중 1명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증가

하면서 일상에서의 개 물림 사고나 소음·배설물 피해, 동물 학대나 불법 진료 등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이 8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국내 대표 동물 구호 단체 케어의 불법 안락사 논란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지난해 3월 20일 맹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9일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동물등록 월령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유기동물 안락사 논란과 관련해 올해 안에 반려동물 학대·유기방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성숙하지 못해 동물 학대나 유기·유실동물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 유기 및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인사말씀

이번에 저희집상사(故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장례)에 공사다망 하심에도 정중한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망중이라 우선 지면을 빌어서나마 머리 숙여 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2019년 2월 7일

남편	조운해	손자	현준	현승	성민
아들	동혁	손녀	연주	희주	은정
딸	옥형	자형	동길	성진	나영
사위	권대규	이정남	이미성	안영주	외손녀
며느리	이정남	이미성	안영주	외손녀	손녀사위
					김정현
					이진상
					이준석
					박지영
					한정록

拜上

故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솔그룹 임직원 일동